

나토의 핵 공유가 갖는 한국의 전술핵 배치에 대한 함의

안 성 규 (安 成 奎) |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미래 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남 정 호 (南 禎 鎬) |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겸임교수**

〈국문요약〉

한국과 나토의 전술핵 배치와 관련된 미국의 전략 및 논리는 정합성이 취약하다. 미국은 소련·러시아의 위협의 강도에 비례해 나토에 전술핵을 배치했고 핵 전쟁 가능성이 줄었음에도 정치적 이유로 나토 전술핵을 최소한의 억제 수단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국에 전술핵 배치와 관련한 함의를 준다. 첫째, 북핵 위협이 강화되고 있지만 전술핵 배치 필요 논의를 피하고, 나토와 달리 전술핵의 정치적 역할을 부인하는 미국에 대해 한국은 나토 상황을 근거로 동맹으로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적시할 수 있다. 둘째, 전술핵 배치 요구 시 미국의 시혜적·일방적 재배치를 배제하고 ‘위험 공유’와 ‘역할 분담’이라는 나토의 ‘항구적 방식’이 돼야 함을 한국은 명백히 해야 한다. 논의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과 나토 70년 전술핵 공유 역사에서 핵의 물리적·작전적·정보적 공유와 관련된 10개 조치가 북한 압박 및 비핵화 유도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소통해야 한다.

Keywords | 전술핵, 전략개념, 핵 동맹, 핵 공유, 위험 부담, 역할 분담.

* 저자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공격성 연구”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아산정책연구원 편집주간을 했으며, 중앙일보 러시아 특파원, 중앙일보 CIS 순회특파원, 중앙일보 중앙선데이 외교안보 에디터 등을 역임했다. 벨기에 자유 대학 (VUB) 산하 유럽정책연구소 (IES, Institute for European Studies)에서 방문연구원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변화를 연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교수, 성균관대학교 정치학과 강사 등을 했으며 현재는 동대학 글로벌 미래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이다.

**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겸임 교수 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본부장, 영국 런던정경대 (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고려대에서 유엔사령부에 관한 연구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앙일보에서 국제문제 전문기자로도 활동했다.

I. 서론

1. 문제 제기

2023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이 창설됐지만 나토의 핵기획그룹(NPG, Nuclear PLanning Group)과 다르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핵심 이유는 전술핵 배치를 중요 요소로 하는 나토 방식 핵 공유(Nuclear Sharing)가 배제됐기 때문이다.

유럽 배치 전술핵 사용의 최종 결정권은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해도 의미가 없다는 관점도 있지만,¹⁾ NPG에서 전술핵은 여전히 중요한 억지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술핵 배치 방식을 통한 핵 공유가 한미 동맹에도 가능한지 나토의 핵 공유 역사를 통해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냉전 이전과 이후에 걸쳐 전술핵은 미 대 유럽 핵전략의 필수요소이자 핵 공유와 밀접히 관련되는데 미국의 대한 확장억지에도 그런 필요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유럽에는 2021년 현재 B61-3과 B61-4 중력 폭탄 등 100여 개 전술핵 탄두가 5개국 6개 기지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 또 나토의 핵 공유는 ‘미 전술핵의 유럽 배치와 공동 운용’으로 인식되지만 ‘위험 공유’와 ‘역할 분담’이란 개념이 병행된다. 한국도 이런 개념을 소화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위험 공유는 미국의 핵 인프라를 주둔시킬 경우 잠재적 침략자의 핵 표적이 되는 위험을 감수한다는 의미이며,³⁾ 역할 공유는 핵 방어가 결정되면 회원국은 역할을 분담한다는 것이다.

전술핵 배치 초기, 나토와 미국 사이엔 ‘어떤 핵무기가 언제 어떻게 사용되며 그 과정에서 나토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논쟁이 일었다.⁴⁾ 전술핵은 ‘핵탄두의 물리적 공유와 비물리적 공유’가 병행됐다. 물리적 공유는 전술핵 관련 부담이

1) 권혁철, “미국이 형제와도 안 하는 핵공유를 한국과 한다고요?,” 「한겨레」, (2023.1.22.),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1076654.html?_ns=r3(검색일: 2023.1.23).

2) Center for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Fact Sheet: U.S. Nuclear Weapons in Europe*, (August, 2021), p. 1.

3) Karl-Heinz Kamp and Robertus C.N. Remkes, “Options for NATO Nuclear Sharing,” in *Reducing Nuclear Risks in Europe: A Framework for Action*, ed. Steve Andreasen and Isabelle Williams, (Washington D.C.: NTI, 2011), p. 95.

4) 나토엔 미국도 포함된다. 그러나 미국과 나토 관계를 연구하는 많은 논문은 나토를 유럽 중심 기구로 다루는 경향도 보인다. 이는 미국과 다른 회원국 관계를 논의할 때 분석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 제시되는 미국의 비밀 해제 문서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본 연구에도 ‘나토 전체’와 ‘유럽 나토’라는 용어가 맥락에 따라 각각 사용됐다.

여러 회원국에 수직적-기능적으로 배분되는 것이다. 비물리적 공유는 정보·작전 측면에서 NPG라는 제도로 귀결됐다. 냉전기에 확립된 ‘전술핵 배치 국가와 비배치 국가 간 역할 분담 및 위험 부담’이라는 핵 공유 원칙은 탈냉전기로 이어졌다. 탈냉전기엔 전술핵에 대한 나토의 의존도는 낮아졌지만 동구권 합류로 핵공유의 폭은 넓어졌고 러시아 위협이 늘면서 필요성은 더 높아진다.

한국이 전술핵 도입으로 ‘핵 동맹’이 되면 안보를 강화할 수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핵 위협에 노출된다. 북한의 핵 위협을 넘는 위험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32개 회원으로 구성된 나토의 개별국은 분담 최소화 혹은 분담 회피 전략을 택할 수 있지만 한국은 단독 분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동북아 국가도 동참시켜 부담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는가? 또 전술핵 재배치 시 위험 부담 및 역할 분담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등의 문제도 중요하다.

본 논문은 나토의 핵 공유와 전술핵 배치 과정에서 한국에 주는 함의를 찾는다. 나토의 전술핵 배치에서 어떤 전략적 고려와 논쟁이 있었는지 검토한 뒤 그 과정이 한국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본다. 이어 재배치 시 나토에서 어떤 핵공유 방식을 가져올지, 그 방식을 대북 억제에 활용할 수 있는지도 살핀다.

연구는 냉전기 4차례, 탈냉전기 4차례에 걸쳐 발표된 전략개념(Strategic Concepts)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전략개념은 나토 동맹국들이 정치·군사적 발전을 통해 미래의 위협과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⁵⁾ 연구는 문헌과 자료를 통한 역사적 분석 방식으로 진행한다.

그러나 연구의 한계도 분명하다. 나토에서 함의를 도출하려면 미국과 나토 NPG 소속 국가의 상호작용도 살펴야 한다. 그러나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관련 자료가 비밀 해제되지 않아 연구에 기본적 제약이 있다. 나아가 심층 분석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나 이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는 주제다.

2. 기존 연구 검토

국내외에 걸쳐 나토 핵 공유 관련 연구는 많지 않다는 점이 지적된다.⁶⁾ 다국적 핵군(MLF, Multilateral Force)과 관련한 김진호의 연구가 있으나 이는 본 연

5) “Strategic Concepts,”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July 18, 2022), https://www.nato.int/cps/en/natohq/topics_56626.htm (검색일: 2020.7.9).

6) 황일도, “동맹과 핵공유: NATO 사례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시사점,” 『국가전략』, 제23권 제1호, (2017), p. 7.

구에 활용하기엔 범위가 제한된다.⁷⁾ 핵 공유와 관련해 의미 있는 국내 연구는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에 집중돼 있다. 황일도는 전술핵 배치와 관련된 연구로 유럽 배치 미국 전술핵의 역사와 운용 실태를 상세히 다룬다.⁸⁾ 그런데 핵 공유의 의미를 탈냉전 이후의 핵 계획 그룹과 확장억제 관련 기구들의 역할 비교에서 찾는다. 역사적 교훈과 전술핵 배치 시 북한 비핵화와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본 연구와 같은 분석은 없다.

박휘락은 전술핵 배치의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근거를 나토와의 비교를 통한 동맹 권리 차원에서 찾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다르다.⁹⁾ 박휘락은 다른 연구에서 나토의 핵 공유와 운용 실태에 대한 개론적 언급도 했다.¹⁰⁾ 이 글은 나토가 핵 공유를 하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을 뿐 한국에 필요한 세부 논리는 다루지 않는다. 김국현 역시 전술핵 배치의 필요성을 이끌어낸다.¹¹⁾ 이 글의 나토 핵 공유와 운용 실태 개관은 더 적다. 이들 논문은 핵 공유의 경과와 한국이 모색해야 할 ‘위험 분담과 역할 공유’라는 문제를 다루거나 우리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전략을 추출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나토에 전술핵이 있으니 한국도 배치해야 한다는 단순 논리가 아닌, 전술핵과 관련된 미 핵전략의 부정합성을 통해 재배치 논리를 모색한다. 이어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엔 위험 공유와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한다.

유럽에서는 콜(Kohl)의 “Nuclear sharing in NATO and the multilateral force” 등 1960년대 논문이 있으나 이후 상황을 담지 않았다.¹²⁾ 본 연구에선 세일(Sayle)과 에게랜드(Egeland) 연구에 의미를 둔다.¹³⁾ 세일은 나토 전술핵이 어

7) 김진호, “영국의 ANF(Atlantic Nuclear Force)구상과 서독 1963-1965,” 『서양사론』, 제117호 (2013), pp. 5-39.

8) 황일도(2017), *op. cit.*, pp. 5-32.

9) 박휘락, “전술핵 배치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평가,” 『군사발전연구』, 제11권 제2호, 통권 16호 (2017), pp. 1-24.

10) 박휘락, “나토 핵공유(nuclear sharing) 체제의 현황과 동북아시아 도입에 관한 시론적 분석,” 『국가전략』, 제27권 제1호 (2021 봄), pp. 103-128.

11) 김국현, “NATO식 핵 공유를 통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필요성,” 『국가전략』, 제28권 2호, (2022 여름), pp. 123-146.

12) Wilfrid L. Kohl, “Nuclear Sharing in Nato and the Multilateral Force,”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80, No. 1 (March 1965), pp. 88-109.

13) Andrews T. Sayle, “A nuclear education: the origins of NATO’s Nuclear Planning Group,”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43 No. 6-7 (2020), pp. 920-56.; Kjolvig Egeland, “Spreading the Burden: How NATO Became a ‘Nuclear’ Alliance,” *Diplomacy and Statecraft*, Vol. 31, No. 1 (2020), pp. 143-167.

떻게 도입됐고 관련 논쟁이 어떻게 됐는지를 NPG 도입 시점까지 설명한다. 그의 연구는 그 과정이 격동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에게랜드는 냉전 시 전략개념의 전개와 핵 배치과정을 설명한다. 논문은 핵 공유 탄생 과정에서 발생한 동맹 내 갈등을 상세히 다룬다는 점에서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비밀 해제된 나토 최신 문서를 사용하는 이 두 논문은 핵 공유와 전술핵 배치과정을 생생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II. 나토 전술핵 공유, 발전 과정과 형식

나토의 전술핵 공유는 크게 전술핵 탄두의 물리적 공유 및 작전·정보적 공유라는 두 체제로 구성돼 있다. 물리적 공유는 미국이 전술핵을 해당국과의 합의에 따라 해당국에 반입하는 것을, 작전·정보적 공유는 이렇게 반입된 전술핵 탄두를 해당국의 운반 체계와 결합해 작전에 투입되는 것이다.

1. 탄두의 물리적 공유

가. 냉전기

1) 1·2·3차 전략개념과 물리적 공유

냉전 초기 트루만 행정부는 대소 봉쇄정책을, 아이젠하워 정부는 대량보복 전략을 전개했다. 소련이 공격하면 핵으로 보복한다는 전략이다.¹⁴⁾

1차 전략개념 DC 6/1(북대서양 지역의 방어를 위한 개념)은 트루만 행정부 시기인 1949년 12월 발표됐다. 주요 원칙으로 '(동맹의) 자조와 상호 원조를 통해 무장 공격을 방어하는 공동 행동'과 '개별 동맹의 상황, 책임 및 자원과 일치하는 가장 효과적인 형태의 기여'라고 명기했다. 7(a)항은 '동맹국들은 예외 없이 핵폭탄의 신속한 수송(delivery)을 포함한 전략 폭격의 수행 능력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이 능력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가능한 지원을 받는 미국의 책임'으로 규정됐다.¹⁵⁾

2차 전략개념 MC 3/5(북대서양 지역 방어를 위한 개념) 역시 트루만 정부

14) 전성훈, “억지이론과 억지전략에 대한 소고,” 『전략연구』, 통권 제31호 (2004), pp. 133-134.; 김일수·유호근, “미국의 국가안보와 핵억지 전략의 변화: 트루먼-트럼프 행정부까지,”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7권 제4호 (2019), pp. 15-16.

15) Egeland(2020), *op. cit.*, p. 147.

시기인 1952년 12월 발표됐는데 1차와 내용은 같다. 5조 b항은 ‘동맹이 상황, 책임 및 자원에 부합하는 기여를 한다’는 원칙을 재언급했다.

아이젠하워 정부 초기인 1953년 8월 유럽연합군최고사령관(SACEUR, Supreme Allied Commander Europe)은 핵무기의 나토 전략 통합을 검토하기 위해 나토사령부(SHAP, Supreme Headquarters Allied Powers Europe)에 "New Approach Group"을 만들었다.¹⁶⁾ 이 기구는 1954년 7월 북대서양위원회(NAC, North Atlantic Council)에 ‘유럽연합군사령부(ACE, Allied Command Europe)의 능력계획 1957’을 발표했다. 내용은 소련이 핵을 쓰지 않아도 핵무기를 사용할 필요성을 반복한 것이다.¹⁷⁾

1954년 11월 나토는 핵무기 사용을 논의한 최초의 전략 문서 MC 48 ‘향후 5년간 나토 군사력 증강의 가장 효과적인 패턴’을 승인했다. 5조는 핵무기가 사용되는 미래전에서 주도권을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해졌다고 밝히 핵 선제 공격의 문도 열어줬다.¹⁸⁾

1957년 5월 발표된 세 번째 전략개념 MC 14/2에는 나토와의 전술핵 통합이 규정됐다. MC 14/2는 이전처럼 즉각적 핵무기 사용을 규정하면서도(12조 c항, 24조 b) 내용이 더 많아졌다. 13조 c항은 핵 선제 사용에 대비하지 않으면 소련의 신속한 유럽 점령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¹⁹⁾ 이전 전략개념엔 없던 ‘전술핵’도 새 문서에는 명기됐다.

1957년 10월 소련이 스푸트니크를 발사하자 미국은 나토 내 핵무기 비축을 서둘렀다.²⁰⁾ 그해 12월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 국무장관은 이를 공식 제안했다.²¹⁾ 주 대상국은 서독과 이탈리아였다.²²⁾ 미국은 점령군으로서 양국을 압박하기가 쉬웠다.²³⁾ 둘 중 더 컸던 서독은 13개 저장소를 계획했고 폭

16) NATO, *Strategic Concepts* https://www.nato.int/cps/en/natohq/topics_56626.htm (검색일: 2020.7.24).

17) The White House, "Memorandum for the secretary of State,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Chairman, Joint chief of Staff," (8 December 1954). Hans M. Kristensen은 실제 배치 시점을 1954년 9월로 본다. Kristensen, "U.S. Nuclear Weapons in Europe,"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2005), p. 24.

18) MC 48/2는 atomic and thermonuclear weapons를 Nuclear weapon으로 정의한다.

19) Egeland(2020), *op. cit.*, p. 150

20) Department of State, "NATO Atomic Stockpile," by Charles B. Elbrick (23 October 1957).

21) Department of State, "Memorandum of Conversation with Chancellor Adenauer," (14 December 1957).

22) *Ibid.*

23) The White House, "Memorandum for the secretary of State,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Chairman, Joint chief of Staff," (8 December 1954).

격기 편대에 무기를 제공하는 저장소도 지정됐다.²⁴⁾ 1959년까지 SHAPE는 유럽 전역에 153개 핵 저장소를 계획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서독으로 예정됐다.²⁵⁾ 서독은 아울러 핵탄두 장착 가능한 어니스트 존 미사일, 마타도르 미사일 등을 미국에 주문했고 F-84 전투기는 핵 무장 변환 키트를 장착했다. 또 핵 능력을 가진 F-104 인수 협상도 했다²⁶⁾.

1960년 3월, 미국은 나이키, 어네스트 존, 코퍼럴, 마타도르, 라크로스, 메이스(이상 미사일), 준중거리미사일(IRBM, 영국-이탈리아-터키 배치), F-84 변환 키트, F-100/104 등 항공기, 테비 크로켓 핵탄두 단거리 무반동포 등의 운반 수단을 나토에 제시했다.²⁷⁾ 전략핵 배치 움직임도 나타났다. 1960년 12월, 미국은 SACEUR에 폴라리스 잠수함 5척 할당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NATO에 80개의 MRBM 미사일 제공하는 것으로 방침은 케네디 정부로까지 이어졌다.²⁸⁾

2) 4차 전략개념과 물리적 공유

케네디 행정부는 직전 행정부를 비판하면서 유연 대응(Flexible Response) 전략을 채택했다. 1962년 5월 로버트 맥나마라(Robert McNamara) 국방장관이 제시하고 67년 공식 채택된 이 전략은 소련 침공 시 핵을 포함, 다양한 군사적 대응을 하지만 제한 침공 시에는 재래식 군사력의 역할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이 전략은 나토의 핵무기 역할을 ①소련의 핵전쟁 개시 억제 ②재래식 전쟁 실패 시 소련에 전쟁 종료를 설득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 등으로 제한하려 했다.²⁹⁾

케네디 행정부 시절 미소 핵 경쟁은 격화됐는데 미국은 소련에 보복할 수 있는 다변화된 핵무기 체계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 폭격기 등의 플랫폼을 발전시켰다. 또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 전략도 수립했다.³⁰⁾

유연 대응 및 MAD 전략에 따라 유럽 핵 무장도 강화됐다. 1961년 1월, SACEUR는 NAC에 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실은 민간 위장 트럭이 ‘유럽 도로 약 30만

24) Department of State, “NATO Atomic Stockpile in Germany,” (26 January 1959).

25) Sayle(2020), *op. cit.*, p. 927.

26) Department of State, “Atomic Armament of Germany,” (25 November 1958).

27) Department of State, “Provision of Advanced Weapons to NATO Countries (Other than IRBMs),” (23 March 1960).

28) Sayle(2020), *op. cit.*, p. 945.

29) 전성훈(2004), *op. cit.*, p. 135.

30) 김일수·유호근(2019), *op. cit.*, pp. 16-17.

마일을 운행하며 700개 목표에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³¹⁾

유럽 동맹국 내 미국의 전술핵은 다양했다. 항공 및 전장(battlefield)용으로 500개 핵무기를 배치했으며, 공격용 125개, 전장용 420개, 방공망용 480개 핵탄두도 배치됐다.³²⁾ 결국 1962년 7월 당시 약 1580개 핵탄두가 배치됐다. 1962년 9월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아테네 나토 회의에서 서유럽에 5000개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다고 밝혔다.³³⁾

나토의 전술핵 참여는 심화됐다. 1964년 5월 미국은 700개에 달하는 SACEUR의 표적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상세계획을 제시했다. 미국은 총 1800회의 중박 출격(sortie)을 계획하면서 700개 목표 중 SACEUR는 90개, 미군은 300개를 맡고 나머지는 나토-미군 합동으로 공격한다는 것이었다.³⁴⁾ 나토의 역할은 작지만 그럼에도 나토 전술핵의 역할은 분명했다.

이런 분위기는 4번째 전략개념에서 재확인됐다. 1968년 1월 발표된 전략개념 MC 14/3은 핵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25조 b항은 전술핵을 나토 주요 사령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억제력의 필수 구성요소로 정의했다. 이 전략개념에 따라 미 핵무기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터키, 네덜란드, 그리스, 벨기에로 퍼져 1971년 약 7,300개 핵탄두로 정점을 찍은 뒤 1975~1980년 5,800개로 줄었다. 1990년 5월 NPG는 “1980년 4000개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이후 1991년 6월 2500개 미만이 됐으며 그 중 1400개가 항공기용 중력 전술핵탄이었다.³⁵⁾

나. 탈냉전기

1991년 11월 발표된 탈냉전기 첫 전략개념은 전술핵 감축이었다. 한 달 전 NPG가 발표한 “유럽 비축 항공 운반 핵무기 수를 50% 줄인 700기로 만들 것”이라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문서 39항은 “전진 방어(forward defence) 개념에서 축소된 전진 전개(forward presence)로 전환하고, 핵무기 의존 축소를 위해 유연 대응 원칙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56항은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가능

31) Sayle(2020), *op. cit.*, p. 929.

32) White House, “White House Briefing for Joint Committee on Atomic Energy,” (4 May 1962).

33) Department of the Army, Staff Communications office, (11 September 1962).

34) North Atlantic Council, “Statement made on Saturday 5 May by Secretary McNamara at the NATO ministerial meeting in Athens,” (5 May 1962).

35) Kristensen(2005), *op. cit.*, pp. 26-28.

성은 줄었고 하위 전략 핵전력을 대폭 줄일 수 있다...하위 핵전력은 필요 시 해상 시스템으로 보완될 수 있는 이중 능력 항공기(DCA: Dual Capable Aircraft)로만 구성될 것이다. 하위 전략 핵무기는 정상 상황에서 수상함이나 잠수함에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지상군, 해병, 해군의 핵무기는 모두 제거됐다.³⁶⁾

1999년 4월 발표된 전략개념 64항은 1991년 개념을 확대한다. “무기의 사용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은 크게 줄었다...여기에는 모든 핵 대포와 지상발사 단거리 핵미사일의 제거 및 나토 하위 전략 세력의 유형과 수를 극적으로 줄이는 것이 포함된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2010 전략개념’ 17항은 ‘유럽에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NATO는 핵 동맹’이라고 규정했다. 전술핵은 동맹의 필요조건으로 격상했고 핵 공유도 최대로 확대됐다. ‘2022년 전략개념’ 29조는 “특히 미국의 핵전력은 동맹의 안보에 대한 최고의 보장이다. NATO의 핵 억제 태세도 유럽에 전진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와 동맹국의 기여에 의지한다. NATO 핵 억제 임무에 대한 DCA의 개별국 기여는 여전히 이런 노력의 핵심”이라고 규정한다. 탈냉전기 여전히 나토 안보의 보루인 전술핵을 직접 배치하며 위험 부담에 나서고 있는 국가는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 5개국이다. (<표 1> 참조)

〈표 1〉 유럽의 전술핵

국가	배치 기지(공군)	폭탄 종류	수량	운반수단
독일	Buechel	B61-3/-4	20	PA-200(토네이도)
벨기에	Kleine Broge	B61-3/-4	20	F-16
네덜란드	Volkel	B61-3/-4	20	F-16
이탈리아	Aviano	B61-3/-4	20	F-16(미국)
	Ghedi Torre	B61-3/-4	20	PA-200(토네이도)
터키	Incirlik	B61-3/-4	50	없음
5국	6개 기지		150	

출처: Defense Priorities, Reconsidering U.S. Nuclear Weapons in Europe, Sep 14, 2020.

36) Hans M. Kristensen, “U.S. Nuclear Weapons In Europe,”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2010), slide 3.

2. 핵 공유 지원 체제

가. 물리적 공유 체제

1) 이중 키(Dual Key)

이중 키 방식이란 미사일과 발사대 같은 무기 시스템은 동맹국에 판매되지만 핵탄두는 여전히 미국의 통제와 감독 아래 놓는 것이다. 최종적인 핵무기 사용 결정은 미국에 있다는 의미다. 이는 핵 공유 초기 미국 맥마흔 법에 내재된 핵 무기 공유에 대한 법적 장애물과 강력한 무기를 타국에 배치하는 정치적 문제를 극복하는 열쇠였다.³⁷⁾ 이중 키 체제는 미국과 NATO 동맹국 간 양자 협정에 따라 구축됐는데, 협정을 맺은 동맹국은 자국의 다른 동맹과 양자 협정을 맺더라도 미국과 체결한 협정의 세부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³⁸⁾ 비밀 해제된 1957년 7월 문서에는 “미국은 나토에 어니스트 존 미사일과 같은 이중 핵 무기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런 무기의 사용 훈련을 제안했다”고 밝힌다.³⁹⁾

1961년 6월의 문서도 “이탈리아의 모든 이중 사용 운반 시스템(미사일)이 이중 키 통제 절차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⁴⁰⁾ 60년대 나토 일부 국가는 미국과 이중 키 협정을 맺었고, 거의 모든 동맹국이 유럽의 통합 방위 계획에 참여했다.⁴¹⁾

나토는 탈냉전기에 들어와서도 미국은 여전히 유럽 배치 핵무기의 절대적인 통제와 보호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냉전기부터 체결돼 온 핵 공유협정이라고 밝힌다.⁴²⁾ 미국은 후술하는 DCA에 장착될 탄두의 발사 코드 입력 과정을 장악함으로써 통제와 보호권을 유지하는데 이는 냉전 초기 이후 계속돼 온 방식이다.⁴³⁾

37) 맥마흔 법은 1946년 제정된 원자력법의 다른 이름으로 핵무기 개발 및 원자력 개발, 관리 통제를 군이 아닌 민간이 하도록 한 하도록 한 법이다. 그런데 다른 국가가 원자력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동맹에 균열을 가져왔다. 이 법은 미국이 가까운 동맹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1958년 수정됐다.

38) Sayle(2020), *op. cit.*, p. 926.

39) Department of State, “NATO Atomic Stockpile,” by Charles B. Elbrick (3 September).

40) U.S. Embassy Rome, “Incoming Airgram,” (29 June 1961).

41) Sayle(2020), *op. cit.*, p. 951.

42) “NATO’s nuclear deterrence policy and forces,”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18 July 2022), https://www.nato.int/cps/en/natohq/topics_50068.htm (검색일: 2023.5.5).

43) 가동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황일도(2017), *op. cit.*, pp. 9-11 참조.

2) DCA

탈냉전기 전술핵을 배치한 나토 회원국은 핵과 재래식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DCA를 보유한다. 전술 핵탄두를 사용할 경우, 미국이 핵탄두를 제공하면 해당국 DCA가 출격해 임무를 완수한다.

DCA는 냉전 초기부터 가동됐다. DCA 동맹국은 핵 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와 노하우, 능력을 보유하고 조종사와 함께 장비와 비행기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며 잦은 훈련과 장비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한다.⁴⁴⁾

DCA 참여는 위험하고 쉽지 않은 선택이다. 무엇보다 DCA를 운용할 경우 잠재적 침략자의 자동 핵 표적이 되는 탓이다.⁴⁵⁾ 따라서 DCA 전투기와 병커, 저장 시설 및 기술 인프라 구조를 운용한다는 사실은 위험을 공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⁴⁶⁾ 한편 DCA에는 미국의 일방적인 유럽 전술핵 사용 결정 시 나토 국가가 운송을 거부함으로써 핵전쟁으로의 비화를 막는다는 소극적 의미도 포함돼 있다.⁴⁷⁾

DCA의 효율성에 대한 반론도 있다. 정밀 유도무기의 발전으로 미 본토의 핵무기로 충분히 공격 가능하며, 현재 DCA로 사용되는 F-15, F-16기가 적정 연한을 넘겼다는 점, 전술핵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DCA의 역할을 훼손하는 현대화 및 조달 계획 등이 꼽힌다.⁴⁸⁾

3) SNOWCAT(Support of Nuclear Operations with Conventional Attacks)

SNOWCAT은 동맹의 비핵 항공기로 핵 공중작전을 지원하는 작전이다. 핵 무장 나토 항공기가 공격 임무에 투입될 경우, SNOWCAT 참여 항공기들은 공중 급유나 수색 및 구조 작전과 같은 지원을 한다.⁴⁹⁾

SNOWCAT의 세부 내용은 비밀이지만 초기 핵 전쟁에서의 승리가 개별국 영

44) Didier Audenaert, "Belgium Should not Change Strategy on her Contribution to NATO'S Nuclear Role Sharing," *Egmont Paper*, (2020), p. 13.

45) Kamp and Remkes(2011), *op. cit.*, p. 90.

46) Heinrich Brauß and Christian Mölling, "Germany's Role in NATO's Nuclear Sharing: The Purchasing Decision for the Tornado's Successor Aircraft," *DGAP Policy Brief*, No. 4 (2020), p. 4.

47) 황일도(2017), *op. cit.*, p. 10.

48) Richard P. Carver, "Signaling the End of Deterrence Afforded by Dual Capable Aircraft," *Research design paper* (Maxwell AFB, AL: Air War College Air University, 2017), pp. 7-10; Tom Sauer and Bob van der Zwaan, "U.S. Tactical Nuclear Weapons in Europe after NATO's Lisbon Summit: Why Their Withdrawal Is Desirable and Feasible," *Belfer Center Discussion Paper*, No. 05 (2011), pp. 17-33.

49) Kamp and Remkes(2011), *op. cit.*, p. 94.

토의 대공 방어보다 우선시 된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다.⁵⁰⁾ 2022년 현재 SNOWCAT 참가국은 체코, 덴마크, 그리스, 헝가리,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등이다.

4) 핵무기 훈련

1956년 12월 나토 문서는 “미국이 나토에 새로운 무기 사용 훈련을 밝힌다.⁵¹⁾ 1957년 9월에는 이미 111명 나토 요원들에 대한 핵무기 운반 훈련이 시행됐다.⁵²⁾

1959년 11월 문서도 “크리스티안 허터 장관 대행은 아이젠하워에게 핵 비축 계획에는 두 가지 유형의 양자 협정이 포함된다고 알려줬는데, 하나는 미국의 관리(custody) 및 훈련 요원, 재정 비용, 그리고 통제와 무기 사용을 위한 준비에 관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주재국 군대의 훈련에 필요한 제한된 자료 및 장비의 전송량’을 규정했다”고 밝힌다.⁵³⁾ 1960년 8월 문서는 “나토 국가들에 무기 훈련과 기타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원자력법에 따라 요구되는 협정은 이미 이탈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터키와 체결되었다”고 밝힌다.⁵⁴⁾ 오늘날 핵무기 훈련은 Stead Fast Noon 훈련으로 대체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정보·작전·기획 공유

미국은 나토 배치 핵무기 사용과 관련된 지휘권 논의를 기피했다. 동맹국들에게 핵무기 사용과 관련된 주권적 결정을 양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⁵⁵⁾

1·2차 전략개념이 발표된 시기는 제2차 대전 직후로 소련 봉쇄를 수행할 수 있는 핵 능력은 미국만 독점적으로 보유했기 때문에 나토 다른 국가들의 역할은 기대할 수 없었으며 핵 공유 요구도 미미했다. 미국의 맥마흔법도 큰 걸림돌이었다. 이 법 때문에 당시 아이젠하워 나토 연합군 최고 사령관은 핵무기를 나토 방어에 통합할 수 없었다.⁵⁶⁾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나토 작전계획이 현실적이려면 핵무기 정보를 나토와

50) Egeland(2020), *op. cit.*, p. 150.

51) Department of State, “Program to Increase NATO Nuclear Capability and Secure Certain Base Rights,” by Charles B. Elbrick, (7 November, 1956).

52) Department of State(1957), *op. cit.*

53) Department of State, “Agreement with U.K. re GENIE Missile,” (29 October, 1959).

54) Department of State, “Memorandum of Conversation,” (24 August, 1960).

55) Sayle(2020), *op. cit.*, p. 927.

56) *Ibid*, pp. 920-956.

더 광범위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1953년 국가안보회의(NSC)는 ‘동맹국에 대한 핵 정보 제공’이라는 제목의 NSC 151/1(1953년 11월)과 151/2(1953년 12월) 두 문서를 채택했다.⁵⁷⁾ 아이젠하워 정부는 그 수단으로 핵 교육을 제시했다. 당시 유럽 주둔 미국 사령부(USAREUR)는 새로운 NATO 특수 무기 학교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는데 여기에 ‘신비한 무기군’이 나토 사령관의 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는 가정이 제시됐다.⁵⁸⁾

1954년 11월에 채택된 전략문서 MC 48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NAC에서 핵무기 사용 방법 등을 공개 논의하지 못하도록 했다.⁵⁹⁾ 그 결과 NAC가 핵 사용 지휘권을 가졌는지는 논의되지 않았다. ‘전시에 누가 핵 사용을 결정하느냐’는 ‘동맹 초미의 관심사’는 방치됐다.⁶⁰⁾

그러다 상황이 서서히 바뀐다. 1956년 미국과 나토는 정보 협정을 체결, 나토 국방계획에 필요한 핵무기 정보를 더 많이 이전하고 훈련할 수 있게 됐다.⁶¹⁾ 그러나 이 역시 핵 공동 지휘가 아닌 핵 브리핑 수준이었다.

나토 배치 핵이 늘어날수록 최종 지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문제와 관련해 광범위한 논쟁이 일어났다. 미국은 NAC에 권한이 있다고 했지만 NAC가 어떤 방식의 결정권을 갖는지, 진정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⁶²⁾

케네디 정부는 핵 정보 공유에 대해 한 걸음 더 나가려 했다. 소련의 위협이 급속히 커지면서 ‘맥나마라주의 (McNamarism)’가 출현했다. 맥나마라는 유럽이 필요한 정보를 얻으면 핵 문제와 나토 동맹 방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지지하게 될 것으로 믿었다.⁶³⁾

케네디 정부는 1960년 12월 나토에 ‘핵 공유’ 개념의 일환으로 다국적 핵부대(Multilateral Force, MLF)도 제안했다. MLF는 폴라리스 미사일을 장착한 해상 핵전력을 나토 체제 내에서 운영한다는 개념이었다.⁶⁴⁾ 그러나 MLF는 덴마크, 캐나다, 노르웨이, 포르투갈 등의 반대에 직면했다.⁶⁵⁾ MLF는 1966년 실패로 결

57) Sayle은 앞의 글 p. 195에서 MC151/2에는 ‘선택된 동맹국 정부에 핵 에너지 분야의 정보 제공을 늘리는 정책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NSC 151/1-2, p. 5.

58) Sayle(2020), *op. cit.*, p. 925.

59) *Ibid.*, p. 926.

60) *Ibid.*, p. 928.

61) *Ibid.*, p. 926.

62) *Ibid.*, pp. 931-932.

63) *Ibid.*, p. 921.

64) Egeland(2020), *op. cit.*, p. 153. Sayle, *Ibid.*, p. 933.

65) Egeland, *Ibid.*, pp. 151-153.

론이 나왔고 미국과 나토는 훨씬 뒤 1966년 핵 정책에 관한 자문포럼인 핵 국방 문제위원회(Nuclear Defence Affairs Committee)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케네디 정부는 1962년 동맹이 핵무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국방 데이터 프로그램(NDDP: NATO Defense Data Progrm)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역시 근본적으로 브리핑에 불과했다.⁶⁶⁾

존슨 행정부로 바뀐 1964년 NDDP 실패를 확인한 미국은 1965년 12월 나토 핵문제 논의를 위한 ‘국방장관 특별(select)위원회’를 구성했고, 맥나마라는 이를 '핵무기 사용 협의 및 핵 정책 계획 등 나토의 공동 핵무기 책임 과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했다.⁶⁷⁾ 이는 1966년 말 NPG로 알려진 상임위원회로 발전했다. 비물리적 핵 공유에 참여한 나토 회원국들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나토의 핵 공유 현황

구분	물리적 공유			비물리적 핵 공유	
	전술핵 보유	DCA	SNOWCAT	NPG	핵 정책
알바니아				○	○
벨기에		○		○	○
불가리아				○	○
캐나다				○	○
크로아티아				○	○
체코 공화국			○	○	○
덴마크			○	○	○
에스토니아				○	○
프랑스	○				○
독일		○		○	○
그리스			○	○	○
헝가리			○	○	○
아일랜드				○	○
이탈리아		○		○	○
라트비아				○	○
리투아니아				○	○
룩셈부르크				○	○
네덜란드		○		○	○
노르웨이			○	○	○
폴란드			○	○	○
포르투갈				○	○
루마니아			○	○	○
슬로바키아				○	○

66) Sayle(2020), *op. cit.*, pp. 937-948.

67) *Ibid*, p. 951.

구분	물리적 공유			비물리적 핵 공유	
	전술핵 보유	DCA	SNOWCAT	NPG	핵 정책
슬로베니아				o	o
스페인				o	o
터키		o		o	o
영국	o			o	o
미국	o			o	o
총계	3	5	7	27	

출처: Hans M. Kristensen, "U.S. Nuclear Weapons In Europe,"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2019), slide 7.

III. 한국의 전술핵

나토와는 달리 한국에선 전술핵이 일방적으로 반입, 운용됐으며 공유의 자취는 없다. 따라서 나토와 한국은 극단적 차이를 보인다.

1. 도입·퇴출 역사

미국 전술핵의 국내 도입은 1957-58년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육은 미 7사단이 펜토믹 사단(Pentomic Division)으로 개편되면서 배치됐다고 한다. 이 사단에 어네스트 존 전술핵 탄도탄과 M65 280mm 핵 대포탄이 배치됐다. 60년대엔 마타도어 순항 미사일, 핵 지뢰, 나이키-허큘리스 지대공 미사일의 핵 탄두 장착형, 데이비 크로켓 핵 무반동포, 사전트 단거리 핵미사일, 155mm 핵 대포용 탄두 등 전술 핵탄두와 핵 플랫폼이 배치돼 1967년경 핵탄두는 950개가 됐다. 70년대에는 랜스 단거리 전술핵 탄도탄 등이 배치됐다. 그러나 70년대에는 나토처럼 탄두가 줄어 1976년 540여 발, 1985년 150여 발이 됐으며 1991년 철수 전까지 100여 개였다고 알려졌다.⁶⁸⁾

폴 숄테(Paul Schulte)에 따르면 한국의 전술핵 배치는 전 세계적 핵 무기 전진 배치의 일환이었다.⁶⁹⁾ 이에 따르면 1960년대 말까지 한국의 전술핵 탄두는 약 900개에 달했다.

한스 크리스텐슨(Hans Kristensen)에 따르면 미국은 1958년~1991년 33년간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했고 1967년 약 950개의 탄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⁷⁰⁾

68) 양욱, “한반도에 배치됐던 전술핵폭탄,” 『국방과 기술』, 제458호 (2017), pp. 30-31.

69) Paul Schulte, “Tactical Nuclear Weapons in NATO and Beyond: A Historical and Thematic Examination,”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NATO* (Carlisle Barracks, P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12), p. 34.

미 핵무기 한국 첫 반입은 한국 전쟁 종료 4년 반, 유럽 핵무기의 전진 배치가 시작된 지 4년 뒤다. 1958년 1월 미국은 약 150개의 탄두를 가진 4개(또는 5개)의 핵무기 플랫폼을 배치했다. 플랫폼엔 어니스트 존 지대지 미사일, Atomic-Demolition Munition 핵 지뢰, 핵 대포 2문, 280mm 포와 8인치 곡사포, 마타도르 순항 미사일이 포함됐다. 전폭기용 핵폭탄은 1958년 3월 배치됐고, 1960년 7월~1963년 9월 3개의 지대지 미사일 시스템이 반입됐다. 첫 배치 5년 내 7개 핵무기 플랫폼 600개 탄두가 됐다.⁷¹⁾ 모든 연구는 전술핵 도입과정에서 한국과 협의한 바가 있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나토와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국내 전술핵은 1991년을 고비로 모두 철수됐다.

2. 한국과 나토의 ‘핵 공유’ 비교

미국의 한국 전술핵 배치는 ‘핵 공유’ 없는 일방성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미국이 일방적 정책을 취해온 건 한국뿐 아니었다. 한국·대만은 물론, 일본에 대해서도 미국은 나토 식 핵 공유를 할 의도가 없었다. 다음 네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⁷²⁾ 첫째, 미국은 일본을 제외한 한국·대만·필리핀 등 아시아의 동맹 또는 우방국 정부를 핵 공유를 논의할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물론 법 규범도 무시하는 ‘깡패 동맹 (rogue allies)’으로 인식했다. 미국과 동아시아 동맹국 간에는 위계 질서가 존재했다. 이런 관계 속에서는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처럼 상호 평등하게 핵 문제를 논의하는 게 불가능했다. 둘째, 식민지 경험 때문에 동아시아 동맹국들, 특히 한국과 일본 간에 상호 적대감이 강했다. 영·독, 독·불 간에도 앙금이 있었지만 한·일 갈등처럼 심하지는 않았다. 이런 동맹국 간의 심한 불신도 나토와 같은 핵공유 체제를 만들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였다. 셋째, 동아시아 동맹국, 특히 한국과 대만의 북한·중국 공격 가능성 때문에 미국은 핵 공유를 원치 않았다. 이들 나라가 핵무기나 핵 기술을 접하면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끝으로 70·80년대까지 일본은 미국의 핵 공유 파트너가 될 만했지만 핵 피폭 트라우마를 가진 일본은 핵 공유를 거론하기조차 피해 핵공유가 논의될 수 없었다.

70) Hans M. Kristensen and Robert S. Norris, “A history of US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73, No. 6 (2017), p. 349.

71) Hans M. Kristensen and Robert S. Norris(2017), *op. cit.*, p. 351.

72) Elbridge A. Colby, “U.S. nuclear weapon policy and policy making: The Asian experience,” in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NATO*, (ed.), Tom Nicholas et al. (Scotts Valley, California: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2012), pp. 88-91.

따라서 미국과 한국 간에 나토식 핵 공유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중 키 체제의 부재로 탄두는 유럽 주둔 미군이, 운반 수단은 나토 동맹국이 운용하는 DCA로 한다는 식의 공식 합의는 없었다. 핵 협의, 공동 핵 계획 또는 핵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이나 미국의 핵 인프라 주둔에 공식 합의함으로써 핵 공유를 위해 잠재적 침략자의 핵 표적이 된다는 의미의 핵 위협 공유도 없었다. 핵 훈련의 경우 탈냉전기 아시아 및 한국에서 핵무기 관련 미국과의 연합 핵 훈련 역시 없었다.⁷³⁾ 본 연구를 위해 접촉한 한국의 안보 정책 담당 청와대 및 국방부 전 고위 관료들은 냉전기 미국의 핵 훈련에서 한국군은 외곽 경비 등 보조업무를 했고 실제 작전은 미군이 독자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연합 훈련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전시 핵 공격 임무 능력의 신뢰성을 유지하려면 평시 훈련이 필요하다. 미국 핵무기의 유럽 전진 배치와 비핵 나토 국가의 항공기에 대한 핵 타격 임무 할당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주둔미공군(USAFE, U.S. Air Forces in Europe)과 나토는 양측 조종사가 핵폭탄 투하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광범위한 폭격 훈련장을 유지했다. 그리스 외에 미국의 핵무기를 보유한 나토 국가에는 적어도 한 개의 훈련장이 있었다.⁷⁴⁾

IV. 나토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의 한국에 대한 함의

1. 전술핵 배치와 관련된 전략적 비정합성

나토의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 과정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에 주는 두 개의 함의 때문이다. 첫째, 미국의 나토 전술핵 배치는 위협의 강도와 비례했으나 한국에는 그렇지 않았고 현재도 마찬가지다. 2장에서 보듯 냉전 초기 소련의 위협이 가증될수록 나토의 전술핵은 늘었다. 이후 데탕트, INF 조약 체결과 같은 완화 국면에선 전술핵은 줄었다. 탈냉전기 긴장 완화 때의 전술핵은 최저로 줄었지만 완전 철수는 없었다. 두 번째, 나토 전 역사에 걸쳐 전술핵은 확장억제의 최소 필수 요소였고 현재도 그렇다. 군사 기술 발달로 전술핵의 불필요성이 지

73) Kamp and Remkes(2011), *op. cit.*, p. 89.

74) Kristensen(2005), *op. cit.*, p. 42.

속적으로 제기되지만 미국은 ‘정치적 이유로’ 나토에 최소 전술핵을 유지한다.

그런데 한국에는 두 관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핵 확장 억제와 관련된 정합성을 미국이 유지하려면 나토와 한국에 적용되는 전략은 같아야 한다. 그러나 둘은 다르게 취급됐다.

북핵 위협이 없던 냉전기의 경우 한국에는 대규모 전술핵이 배치됐지만, 정작 북핵 위협이 가중된 지금은 아예 없다. 나토에는 ‘전술핵 배치로 확장 억제가 보장된다’ 논리가 적용되는 반면 한국에는 ‘전술핵 배치 없이도 확장 억제가 보장된다’는 논리가 사용된다. 이는 미국의 유럽 전술핵 배치 논리가 ‘국가와 관계없는 핵 위협 자체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소련·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는 나토의 전술핵은 특정 국가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한국에는 핵 위협이 있어도 특정 국가의 핵 위협이 아니기 때문에 배치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여겨질 수 있다. 같은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논리가 다르다. 핵 위협의 관점에서만 볼 경우, 한국의 전술핵 비배치가 합리적이라면 나토의 전술핵은 불합리하다. 동일 위협 동일 대응의 논리가 파괴된다. 이를 북한과 소련·러시아의 위협 수준이 다르다는 이유로 설명하려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은 ‘나토에서 전술핵은 최소 필수요소’라는 두 번째 합의와 관련된 부정합성이 드러난다.

정밀유도무기의 발달로 전술핵은 작전 효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나토에 배치된다. 나토의 안보를 보장하는 정치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1991·1999 전략개념은 ‘핵은 정치적 수단’이라고 규정했다.⁷⁵⁾ 침략자의 마음속에 불확실성을 일으킨다. 전술핵은 북한에도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나아가 나토의 미국 전술핵 공유는 유럽 동맹국에게 최악의 상태에서 최소한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2010년 전략개념은 ‘핵이 존재하는 한 나토는 핵 동맹’으로 규정했다.(17항) 2022년 7월 발표된 전략개념도 “나토의 핵 태세는 유럽에 전진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와 관련 동맹국의 기여에 의존한다”고 규정한다. (29항). 탈냉전기 나토 전술핵에 부여하는 이런 의미를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한국에 적용하면 전술핵 배치의 필요성은 더 절실해진다.

그럼에도 미국은 한국 내 전술핵 배치에 부정적이다. 박휘락은 그 이유를 4

75) 1991년 전략개념의 54항, 1999년의 62항의 문구는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nuclear forces of the Allies is political.’로 같다. 2010년의 29항엔 해당 문구가 있다. 1991년, 1999년, 2010년은 ‘As long as nuclear weapons exist, NATO will remain a nuclear alliance’다.

가지 제시했다.⁷⁶⁾ 첫째, 한반도 내 핵 경쟁 격화 가능성이다. 둘째, 배치 시 북한이 선제 공격할 수 있어 핵 전쟁 위험성이 급상승한다. 셋째,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국의 명분 약화다. 넷째, 중국과 러시아의 극단적 반발과 이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입지 및 지역 정세 악화다. 이런 논점은 충분한 설득력을 지니나 모두 반론이 가능하다.

첫째, 핵 경쟁이 일어난다면 이는 북한이 유발한 것이며 전술핵은 북핵에 대한 한미의 대응으로 봐야 한다. 두 번째 핵 전쟁 위험성 증가도 반박 가능하다. 핵 전쟁의 위험성을 감내함으로써 적을 억제한다는 나토의 전술핵과 관련된 전략 개념은 한국의 대북 억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세 번째, 비핵화 명분의 경우 1991년 체결된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북한이 먼저 위반했고 지금은 아예 무시하는 수준이다. 넷째,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이 고려사항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생존이 가장 중요하며,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한 현 단계에서는 주변국 반발이란 부차적이 될 수밖에 없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나토의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 과정에서 유사한 반대 논리가 제기됐었지만 전술핵은 배치됐다. 한국의 안보 환경이 나토의 안보 환경 못지 않게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대 논리는 안보 사치라고도 할 수 있다.

나아가 나토가 공식 인정하는 ‘전술핵의 정치적 의미’는 특히 주목해야 한다. 나토의 ‘정치적 필요성’ 논리가 합리적이라면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북한의 기만 전략과 강화되는 북핵 앞에서 미국은 ‘확장 억제’ 의지를 천명하지만, 북한이 이를 무시하듯 핵 무력을 신장해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는 상실됐다.

미국이 나토에 전술핵을 배치했다는 것은 위기 시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는 확장억제 의지만으로 부족하며 ‘전술핵’이라는 공동 군사력을 구비함으로써 확장 억제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나토를 상대로 한 미국의 확장 억제는 ‘미국 보유 군사력+동원 의지+ α ’로 구성되는데, 전술핵의 나토 배치는 바로 이 ‘ α ’에 해당하며 그것이 전술핵에 담긴 정치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의 확장 억제가 겪는 신뢰의 위기도 바로 이 ‘ α ’와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확장억제가 항상 불신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극복하려면 나토와 같은 ‘ α ’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논리의 연장에서 전술핵은 정치적 의미 차원에서라도 배치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전술핵의 군사적 효용만 강조

76) 박휘락, “전술핵 배치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평가,” 『군사발전연구』, 제11권 제2호 통권 16호 (2017), pp. 16-17.

하고 나토에서와 같은 정치적 의미를 배제한다면 고조되는 북한 핵 위협과 관련해 자국만의 확장억제 논리를 한국에 강요하는 것이며 나토와 비교해 차별적으로 동맹을 대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가 북한 비핵화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 비핵화 목표는 30여 년에 가까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요원해지고 사실상 불가능한 국면에 접어들어가는 가운데 북한의 핵 능력은 더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Plan-B의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는 것이다. 나아가 Plan-B는, 나토의 전술핵 배치 및 핵 공유 역사를 고려할 경우, 미국의 선의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동맹의 권리로 요구하며, 미국이 거부할 경우 논쟁을 통해서라도 확보해야 할 계획임을 환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전술핵은 단순 배치를 넘어 나토 방식의 핵 공유 수준으로 운용돼야 한다. 그간 미국이 전술핵을 일방적으로 반입·반출하고, 한국은 이를 모르거나 그 과정에서 무시됐지만 이런 방식은 더 이상 수용될 수 없다. 나아가 전술핵의 역사는 위험 부담 및 역할 분담이라는 원칙에 입각한 것임을 한국은 유념해야 한다.

2. 핵 공유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갖는 ‘채찍’ 과 ‘당근’ 의 의미

‘전술핵 공유’ 관련 수단들은 대북 억제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한 ‘채찍’ 이나 ‘당근’으로 활용할 수 있다. ‘채찍’은 ‘핵 공유’ 조치를 북한의 핵 위협 강도에 대응해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살라미 식’ 대응을 하는 것이다.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려는 행위자에게 행위의 비용이 이익보다 많음을 확인시킴으로써 그런 행위를 막는 억제 이론에도 부응한다.⁷⁷⁾ 채찍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압박이 될 수 있으며, 확장 억제 조치를 최대화 방향으로 강화함으로써 전쟁 방어 조치도 된다.

‘당근’ 전술은 전술핵 공유 관련 조치를 한미가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취한 뒤 북한이 비핵화로 나올 경우 ‘호혜적이자 살라미 방식’으로 해제하는 것이다. 확장 억제조치를 최대한 강화한 뒤 북한의 행보에 따라 완화하는 방식이다. 한국 맞춤형으로 변화시킨 나토의 전술핵 공유 조치와 이의 살라미화 전술은 아래

77) Richard N. Lebow and Janice G. Stein, “Deterrence: The Elusive Dependent Variable,” *World Politics*, Vol. 42, No. 3 (April, 1990), p. 336.

10개다.

첫째, 전술핵 교육 및 훈련. 나토의 Steadfast Noon 같은 연합 핵 훈련을 한미가 공식 합의하되 먼저 미국서 훈련을 개시하고 무대를 점차 한국으로 이동하면 북한은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둘째, SNOWCAT 작전 도입. 전술핵 미도입 단계에서 미국의 대북 전술핵 작전에 한국이 SNOWCAT 방식으로 참여하면 한미연합 방어 의지를 과시하게 된다. 처음에는 참여 방침 고려, 이후 참여 선언, 실제 참여, 참여 폭 확대의 순서로 나아간다. 한미일 3국이 연합 SNOWCAT 작전을 하면 미국 핵 자산의 배치 부담 없이 북한에 동맹의 단합을 과시할 수 있다.⁷⁸⁾

셋째, DCA 도입. 한국은 미국 본토 혹은 태평양의 미군 기지로 이동시킨 전술핵을 대상으로 이중 키 방식으로 운영되는 DCA를 구비할 수 있다. 대상 항공기는 F-35기가 적당하다. 기도입 F-35를 DCA화 하려면 변환시켜야 하는데 관련 절차를 DCA기 도입 방침 제시-전환-배치-연합 훈련 참여 등으로 살라미화할 수 있다. 필요시 이를 KF-15, KF-16 등으로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다.

넷째, 전술핵의 주한 미군이나 한미 연합기지 배치. 미 전술핵의 국외 배치를 한국 내 배치로 전환하는 것은 북한에 강력한 압박이 된다. 군산 등 과거에 배치됐던 미군 기지에 선 배치하고 이를 한국 기지로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것도 압력의 순차적 강화가 된다.

다섯째, 전술핵의 배치 위치 카드화다. 냉전 시 바르샤바조약기구(WTO)의 공격을 막기 위해 전술핵을 최전선에 충분히 근접시킨다는 전략이 지배했다.⁷⁹⁾ 한국도 배치 위치를 카드화 할 수 있다. 전방 접근이 남북, 남남 갈등을 일으킬 수 있지만 대북 압박이 강화될 것은 분명하다.

여섯째, 이중 키 방식의 전면 확대. 한국이 DCA 체제 도입해도 북한이 핵 위협 강도를 높이면 이중 키 방식을 육군과 해군으로 확대할 수 있다. 냉전 초 소련의 위협이 높아지면서 육·해·공 모든 영역에서 미국 전술핵이 가동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일곱째, 전략 탄두 지정이다. 미국은 냉전 시 나토 용으로 ICBM, SLBM을

78) David Santoro, "Deterring North Korea: The Next Nuclear-Tailoring Agenda," *War on the Rocks*, <https://warontherocks.com/2017/08/deterring-north-korea-the-next-nuclear-tailoring-agenda/> (검색일: 2022.6.22).

79) Audenaert(2020), *op. cit.*, p.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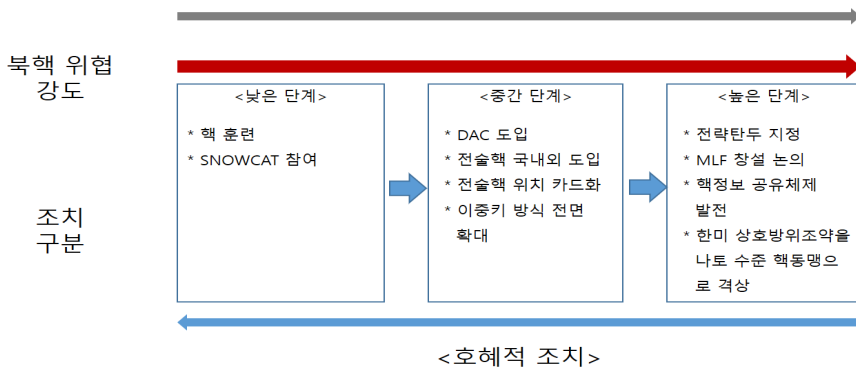
지정했고 나토의 핵 계획에 포함됐었다.⁸⁰⁾ 이런 역사는 미국이 전략핵 가운데 한국용 핵탄두를 별도 지정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한다. 한국군이 미국의 ICBM과 SLBM 운용 플랫폼에 파견 근무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여덟째, MLF 창설 논의. 나토의 MLF 창설은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실패했다. 그러나 한미 연합에서는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만 결정만 하면 된다. MLF의 실패가 궁극적으로 NPG로 발전했지만 MLF 창설 논의는 훨씬 강력한 압력 수단이 될 것이다. 한미 핵 편대 운용도 가능한 아이디어다.

아홉째, 핵 정보 공유 체제의 발전. 냉전 시 나토-미국 간 갈등은 미 핵무기의 범위, 사용 의도에 대한 정보 부족에서도 비롯됐다. 이로 인한 갈등이 핵 공유 확대로 이어졌다는 점은 한미 연합체제의 확장억제 논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2016년 출범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문재인 정부 시기 명목상 2회 개최됐을 뿐이다.⁸¹⁾ 한미가 이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나토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열째, 나토가 핵 동맹으로 한국보다 강력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피침 시 나토 조약 5조가 미국 참여를 법적으로 자동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방어를 위한 미국의 개입을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이 조약을 상호방어의무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사실상 핵동맹으로 격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위의 10개 조치를 ‘채찍’ ‘당근’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그림 1]이다.

[그림 1] 한국 맞춤형 나토의 전술핵 공유 조치 및 살라미화 전술
<강압·억지적 조치>



80) Kamp and Remkes(2011), *op. cit.*, p. 180, p. 193.

81) 정부 안보 핵심 관계자의 비공개 세미나에서의 발언(2022.7.26).

V. 결론: 권리와 위협의 공유

한국에는 나토의 상황을 근거로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할 정치적·군사적 기반이 있다. 재배치는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위반이며, 북한 비핵화 명분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북한이 선언을 훼손한지 오래라는 점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의미 있는 전략일 수 있다. 한국이 나토 식 전술핵 공유를 선제적으로 배제할 필요는 없다.⁸²⁾ 최근 들어 북핵 위협이 심화된 뒤 한국과 미국의 대북 압박 차원의 훈련 등이 강화됐다는 점에 안주해도 안 된다. 그런 조치들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미국의 시혜적 조치라는 성격이 강하며 ‘위험 공유와 역할 분담’이라는 나토의 ‘안정적 전술핵’ 관리 방식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술핵 재배치는 양날의 칼이다. 한국이 저야 할 의무도 크다는 측면 때문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010년 “동맹국에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나토는 핵 동맹으로 남을 것”이라며 “핵 동맹으로서 위험과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 근본”이라고 했다.⁸³⁾ ‘위험과 책임의 공유’ 인식은 한국이 전술핵 재도입을 시도할 경우 필수적 인식이다. 한국이 전술핵을 재배치하면서 훈련 등 역할 분담에서 일부 나토 국가처럼 무임승차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

오늘날 나토 회원국의 거의 반인 13개국엔 핵 관련 역할이 없다.⁸⁴⁾ 그러나 나토에서 핵 공유에서 제외된 무임승차 국가들은 약소국으로, 안보 현안 논의에서 비중이 낮으며 이는 책임 있는 당사자의 태도도 아니다. ‘핵 공유’의 실천은 비핵 동맹국들에게 ‘손을 피에 담그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⁸⁵⁾

그렇다면 나토와 달리 미국과 핵 동맹이 아닌 한국이 핵 동맹으로서 안보 이익과 위험 및 책임 공유라는 부담을 병행할 수 있는가. 핵 공유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질문은 불가피하다. 당장 전술핵의 배치 및 핵 공유가 불가능하더라도 이 문제는 검토되고 대안도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전술핵 도입과 관련된 나토 NPG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82) 김태훈·박수찬, “이종섭, ‘한·미에 최적화된 북핵 대응 강화…나토식 핵공유 고려 안 해,’” 『세계일보』, (2013.1.15),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774172>(검색일: 2023.1.17).

83) Mark Landler, “U.S. Resists Push by Allies for Tactical Nuclear Cuts,” *New York Times*, 22 April 2010, <http://www.nytimes.com/2010/04/23/world/europe/23diplo.html> (검색일: 2022.7.31).

84) 알바니아,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85) Malcolm Chalmers, “NATO’s Nuclear Weapons,” in *NATO’s Tactical Nuclear Dilemma*, ed. Malcolm Chalmers and Simon Lunn (London: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2010), p. 2.

<참고문헌>

- 권혁철. 2023. “미국이 형제와도 안 하는 핵공유를 한국과 한다고요?” 「한겨레」.
1. 22.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1076654.html?_ns=r3
(검색일: 2023.1.23).
- 김국현. 2022. “NATO식 핵 공유를 통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필요성.” 『국가전략』. 제28권 제2호.
- 김일수, 유호근. 2019. “미국의 국가안보와 핵억지 전략의 변화: 트루먼-트럼프 행정부까지.”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7권 제4호.
- 김진호. 2013. “영국의 ANF(Atlantic Nuclear Force)구상과 서독 1963-1965.” 『서양사론』. 제117호.
- 박휘락. 2017. “전술핵 배치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평가.” 『군사발전연구』. 제11권 제2호. 통권 16호.
- _____. 2021. “나토 핵 공유(nuclear sharing) 체제의 현황과 동북아시아 도입에 관한 시론적 분석.” 『국가전략』. 제27권 제1호.
- 양욱. 2017. “한반도에 배치됐던 전술핵폭탄.” 『국방과 기술』. 제458호.
- 전성훈. 2004. “억지이론과 억지전략에 대한 소고.” 『전략연구』. 통권 제31호. pp. 123-148.
- 황일도. 2017. “동맹과 핵공유: NATO 사례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시사점.” 『국가전략』. 제23권 제1호.
- Andreasen, Steve and Isabelle Williams. 2011. *Reducing Nuclear Risks in Europe: A Framework for Action*. Washington D.C.: NTI.
- Audenaert, Didier. 2020. “Belgium Should not Change Strategy on her Contribution to NATO’S Nuclear Role Sharing.” *Egmont Paper*.
- Brauß, Heinrich. and Christian Mölling. 2020. “Germany’s Role in NATO’s Nuclear Sharing: The Purchasing Decision for the Tornado’s Successor Aircraft.” *DGAP Policy Brief*. No. 4.
- Chalmers, Malcolm. 2010. “NATO’s Nuclear Weapons in NATO’s Tactical Nuclear Dilemma.” ed. *Malcolm Chalmers and Simon Lunn*. London: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 Carver, Richard P.. 2017. "Signaling the End of Deterrence Afforded by Dual Capable Aircraft." Research design paper. Air War College Air University.
- Center for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2021. "Fact Sheet: U.S. Nuclear Weapons in Europe."
- Colby, Elbridge A.. 2012. 'U.S. nuclear weapon policy and policy making: The Asian experience.' in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NATO*. (ed.). Tom Nicholas et al. Scotts Valley, California: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 Department of State. 1956. "Program to Increase NATO Nuclear Capability and Secure Certain Base Rights." by Charles B. Elbrick.
- _____. 1957. "NATO Atomic Stockpile." by Charles B. Elbrick.
- _____. 1957. "Memorandum of Conversation with Chancellor Adenauer."
- _____. 1958. "Atomic Armament of Germany."
- _____. 1959. "NATO Atomic Stockpile in Germany."
- _____. 1959. "Agreement with U.K. re GENIE Missile."
- _____. 1960. "Provision of Advanced Weapons to NATO Countries (Other than IRBMs)."
- _____. 1960. "Memorandum of Conversation."
- Department of the Army. 1962. Staff Communications office.
- Egeland, Kjolv. 2020. "Spreading the Burden: How NATO Became a 'Nuclear' Alliance." *Diplomacy and Statecraft*. Vol. 31. No. 1.
- Kamp, Karl-Heinz and Remkes Robertus C.N. 2011. "Chapter Four Options for NATO Nuclear Sharing." in *Reducing Nuclear Risks in Europe: A Framework for Action*. (ed.). Steve Andreasen and Isabelle Williams. Washington D.C.: NTI.
- Kristensen, Hans M. 2002. "Preemptive Posturing."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58. No. 5.
- _____. 2005. "U.S. Nuclear Weapons in Europe."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 _____. 2019. "U.S. Nuclear Weapons in Europe."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 Kristensen, Hans M. and Robert S. Norris. 2017. "A history of US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73. No. 6.
- Lebow, Richard Ned. Steind Janice Gross. 1990. "The Elusive Dependent Variable." *World Politics*. Vol. 42. No. 3.
- Nichols, Tom, Douglas Stuart, and Jeffrey D. McCausland. 2012.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NATO*. Carlisle Barracks, P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 North Atlantic Council. 1962. "Statement made on Saturday 5 May by Secretary McNamara at the NATO ministerial meeting in Athens."
- Sauer, Tom and Bob van der Zwaan. 2011. "U.S. Tactical Nuclear Weapons in Europe after NATO's Lisbon Summit: Why Their Withdrawal Is Desirable and Feasible." *Belfer Center Discussion Paper*. No. 2011-05.
- Sayle, Andrews Timothy. 2020. "A nuclear education: the origins of NATO's Nuclear Planning Group."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43. pp. 6-7.
- Schulte, Paul. 2012. "Tactical Nuclear Weapons in NATO and Beyond: A Historical and Thematic Examination." Strategic Studies Institute.
- Supreme Headquarter Allied Powers Europe. 1954. Capabilities Plan Allied Command Europe.
- The White House. 1952. "Memorandum for the secretary of State,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Chairman, Joint chief of Staff."
- _____. 1961. "White House Briefing for Joint Committee on Atomic Energy." U.S. Embassy Rome. "Incoming Airgram." (29 June).
- Wilfrid, L. Kohl. 1965. "Nuclear Sharing in Nato and the Multilateral Force."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80. No. 1.
- Landler, Mark. 2010. "U.S. Resists Push by Allies for Tactical Nuclear Cuts." *New York Times*. 22 April. <http://www.nytimes.com/2010/04/23/world/europe/23diplo.html> (검색일: 2022.7.31).

NATO. 2022. “NATO’s Strategic documents since 1949.” https://www.nato.int/cps/en/natohq/topics_56626.htm (검색일: 2020.7.9).

2022. “NATO’s nuclear deterrence policy and forces,”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July 18), https://www.nato.int/cps/en/natohq/topics_50068.htm (검색일: 2023.5.5).

2022. “Strategic Concepts.”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July 18). https://www.nato.int/cps/en/natohq/topics_56626.htm (검색일: 2020.7.9).

<https://nsarchive.gwu.edu/document/20465-national-security-archive-doc-13-john-foster> (검색일: 2022.7.30).

<https://www.defensepriorities.org/explainers/reconsidering-us-nuclear-weapons-in-europe> (검색일: 2022.8.1).

<https://warontherocks.com/2017/08/deterring-north-korea-the-next-nuclear-tailoring-agenda/> (검색일: 2022.6.27).

NATO's Nuclear Sharing: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Tactical Nuclear Deployment

Sungkyu Ahn | Senior researcher, Institute for the Study of Global Future Strategy,
Sung Kyun Kwan University

Jeongho Nam | Adjunct Professor, The Graduate School of Policy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US strategy and logic related to the 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to South Korea and to NATO are inconsistent. The US deployed nuclear weapons to NATO in proportion to the degree of threat from the Soviet Union (Russia), and maintained them as a minimum deterrent for political reasons, even though the possibility of a nuclear war decreased. Yet, even though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o the South is intensifying, the US has denied the need to deploy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insists their political meaning is unlike that of NATO. The US even dismissed the importance of nuclear weapons as a minimum deterrence measure against North Korea. Accordingly, South Korea has the right to demand that the US redeploy tactical nuclear weapons as in NATO member countries. We should also consider NATO's approach of 'risk sharing and role sharing' rather than just reloca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10 measures, including the physical sharing of nuclear weapons and the sharing of nuclear information, with reference to NATO's 70-year tactical nuclear history. We need to use them to pressure North Korea and induce denuclearization.

Keywords | Tactical Nuclear Weapon, Strategic Concept, Nuclear Alliance, Nuclear Sharing, Risk Sharing, Role division.

논문투고일: 2023.02.14. / 심사외뢰일: 2023.03.07. / 게재확정일: 2023.05.06.